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경과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제3절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V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95년 KEDO와 북한 간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1999년 12월에 KEDO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1년 9월에는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사업이 2년간 중단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 등의 지속적인 사업종료 요구와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감안,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KEDO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에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사업을 종료한다는 데

집행이사국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종료에 따른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종료를 공식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1절 추진경과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의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와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간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KEDO와 북한간에는 협상을 통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미화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자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경수로사업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국전력공사는 1999년 12월 15일 일괄도급방식으로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Turn Key Contract)을 체결하였다.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원자로 1호기 공사는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호기도 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부지 정지, 진입도로, 취·배수방과제, 물 양장,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등 기반시설공사와 함께 생활부지 내 근로자 숙소,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나갔다.

공사착공 이후 KEDO와 북한은 「훈련 의정서」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2002년 10월 새로운 북핵문제가 대두되기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이행을 위한 13개 의정서 중 8개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켰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각종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객화선(주1회)·바지선 운항, 통신망 운용(16회선), 직항공로 개설·운용 등을 합의·시행하였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4월 북한근로자 200명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KEDO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우즈베크 인력을 투입하였다. 현장공사 진행과 함께 2000년 11월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라 북한측 발전소 운영요원 122명과 규제요원 25명의 훈련을 남한 시설에서 실시하고, 고위정책자 과정 19명의 우리측 시설 시찰도 시행하였다.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 1994.10.21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서명
- 1995. 1.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
-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1997. 8.19 부지 정지공사 착공
- 1999.12.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
- 2001. 9. 3 본관기초굴착공사 착공
- 2002. 8. 3 원전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 2002.10.16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대두
- 2003.12. 1 KEDO 집행이사회 합의(2003. 11. 21)에 따라 1년간 사업 중단(suspension) 발효
- 2004.11.26 KEDO 집행이사회 사업중단 조치 1년 연장 결정·발표
- 2005. 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 2005.11.22 KEDO 집행이사회, 종료에 따른 법적 재정적 문제 해결후 사업의 공식 종료를 결정하기로 합의
- 2005.11.30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만료
- 2006. 1. 8 금호 경수로부지 잔류인원 57명 전원 철수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1. 사업중단 조치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로 북핵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KEDO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2년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수로사업 등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 이후 후속의정서 및 북한노동 인력 임금협상 등 북한과 진행되던 각종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발전소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할 북한요원 훈련도 중단되었다. KEDO는 또한 2003년 2월 3일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며 당분간 공사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호기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및 발전소지역 내 부대건물 건설 연기, 원자로 격납용기 첩판, 철근 등 보조 기자재의 발주계약 연기 등 불요불급한 공사의 축소 및 순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중국·북한 간 3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집행이사국간에는 경수로사업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이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들은 수차례 공식·비공식 집행이사회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속도조절 하에서의 사업지속',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또는 '사업의 완전종료(termination)' 등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결과, 2003년 11월 21일 KEDO집행이사회는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2004년 11월 26일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사업 중단기간 중 보존·관리활동 시행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이 발효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의 모든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 2호기 원자로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도방수로 범면 보호 등 기 완료된 시설물의 보호조치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원칙과 비용최소화 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품목은 품질확보 및 작업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시점까지 공정을 완료한 후 보관조치를 취하였다.

부지현장과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한 관리·유지를 위해 부지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와 품질보증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24회)하였다. 1,500여명에 이르던 부지현장 상주인원도 2003년 12월에 우즈베크 인력이,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명이 전원 철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2005년 11월말까지 금호부지에는 KEDO 금호사무소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

하면서 관리하였다.

한편 북한은 KEDO측의 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관련 장비·차량 200여대에 대한 반출을 금지(2003.11월)하고, 2003년 12월에는 출입국절차 강화 등 중단기간 중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KEDO는 사업의 일시중단에 따른 보존·관리활동 및 인력과 장비 철수 등 중단기간중 KEDO와 북한간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KEDO 사무총장단의 방북, 협의 및 북한과 고위전문가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 제기한 ‘잠정조치’ 문제를 2004년 3월 「양해각서」체결로 마무리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측의 의정서 준수 및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KEDO 인원의 부지출입절차 일부 수정, 물양장(부지해안에 KEDO측이 설치한 부두시설) 사용절차 합의 등이었다. 이로써 중단기간중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북한측의 장비반출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KEDO측은 수차례 협의에서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주요 계기시 장비반출금지 조치의 부당성 및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손실보상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KEDO와 협의하여 현장공사의 속도조절(slow down)로 인한 유휴 인력·장비 발생에 따른 참여업체의 피해에 대해 한전을 통해 2003년 12월과 2004년 7월 2차례에 걸쳐 총 64억 5천만원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반출금지에 따른 장비업체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2004년 합동시공단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중장비 41대에 대해 우선 보상(32억원)을 실시한 데 이어, 2005년 들어 KEDO 차원의 보상방안(선 한전 보상, 후 KEDO 보전)이

마련되어 한전이 자체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38억원을 보상하였다.

1997년 8월 사업 착공이후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11월말까지 경수로사업은 시공 21.6%, 종합 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43.2% 등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다. 사업비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조달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미화 15억6천2백만 달러(한국 11억3천7백만 달러, 일본 4억7백만 달러, 유럽연합 1천8백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제3절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

2003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경수로사업의 장래 문제를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의 경수로사업 종료 요구와 2005년의 9·19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KEDO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5년 11월 21일~22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경수로사업 종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수로사업을 종료한다는 데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공식적인 사업종료를 위해서는 종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청산비용 분담 등 재정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정부는 경수로사업이 종료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KEDO 집행이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집행이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집행이사회를 개최, 사업종료를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의 사실상 종료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과 8일 KEDO 대표단이 방북하여 부지인원의 철수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 협의에서 KEDO 측은 북한측에 공식 결정은 없었으나 사실상 종료방향으로 협의중임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은 사업종료를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지체류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는 방침하에 KEDO 집행이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2006년 1월 8일 한겨레호 선박편으로 부지인원 57명에 대한 철수를 완료하였다.